

투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은 기 운
(매일경제신문사 경제학박사)

얼마나 많은 기업이 최고경영책임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서명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할까? 국내외 관심은 지난 8월 14일 오후 5시까지(워싱턴 시간)로 되어 있던 미국기업의 최종 결산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이 어느 정도 지켜질까에 집중되었다. 결과는 2분기 결산서를 제출한 매출액 12억 달러 이상 695개 기업중 90%인 629개사가 마감시한을 지킨 것이었다. 의외로 높은 성과였다. 시한 며칠 전까지 보고서 제출 기업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은 상당수 기업들이 회계장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막판까지 부심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앞으로도 23개 기업은 8월중에, 132개사는 9월중에, 그리고 39개사는 10월중에 최종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7월말 상·하양원 합의와 부시대통령 서명을 거쳐 기업개혁법(Corporate Reform Law)이 발효된 이후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회계빅뱅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엔론 월드컴 등 대형 회계부정 사건으로 미국의 주가가 폭락하고 달러화 가치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 의회와 행정부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미국은 증시대책 일환으로 회계법인의 자율적 감사권을 채택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일련의 회계 부정사건은 자율적 감사권이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정을 조장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따라서 미 정책당국은 자율권 대신 규제강화라는 무기를 들고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당초 백악관이나 공화당 의원들은 회계부정이 소수의 '썩은 사과'(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을 비유) 문제지 회계시스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잇따라 터지는 회계부정 사건은 몇몇의 썩은 사과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 전체의 문제임을 증명해 줬다. 결국 미국 기업의 회계부정에 썩기를 막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혁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기업개혁법의 골자는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강화와 경영자에 대한 벌칙강화다.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에 독립기구를 신설해 회계법인을 감독하고, 회계법인이 동일기업에 대해 감사와 컨설팅 업무를 겸하는 것을 금지했다. 분식결산 등을 통해 주주를 속인 증권 사기범은 최고 25년형, 부정행위를 한 경영자는 최장 20년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한 감사 자료는 5년간 보존토록 하고, 이를 파기했을 경우 10년 금고형에 처하며, 내부고발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러한 제반 법적조치와 아울러 기업 자율적으로 분식회계를 막고자 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스톡옵션의 비용처리다. 지금까지 경영진들에게 보수의 일부로서 지급돼온 스톡옵션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식회계를 조장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경영자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 실적을 과대포장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스톡옵션이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부풀려지게 된다는 점이다.

스톡옵션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데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벤처기업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스코시스템스 제너럴일렉트릭(GE) JP모건 등 굴지의 기업들이 잇따라 스톡옵션을 비용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미국의 회계부정 파문은 외국으로도 비화됐다. 예컨대 미 의회에서 엔론사건에 대해 증언을 하던 한 회계학자가 일본 소니의 회계처리에 의문을 던지자 이 회사의 주가가 한 때 급락했다. 선진경영으로 유명한 오릭스의 경우도 이 회사 출신 증권 애널리스트가 회계수법과 정보개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미국의 감독기구 권한은 미국에 주식을 상장한 기업이나 국외에서 주식을 상장한 미국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에까지 미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의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계부정을 막기 위한 미국 정책당국의 강경한 대응 자체에 비판을 가할 명분은 적으며, 결국은 미국의 감독기준이 글로벌스탠다드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국식 회계제도를 크게 원용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미국과 유사한 회계부정이 저질러지지 않고 있다는 보장이 없다. 3000명의 직원을 거느린 미 SEC도 회계부정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회계감독체제가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은 우리로서는 더욱 허술한 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만큼 우리도 시스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윤리다. 어떤 제도든 그 운용은 결국 인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회계부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시스템 정비 이상으로 경영자와 회계사 등의 도덕성 확립이 중요하다.